

01

분홍색 유도선이 필요한 뉴스 : 사실과 의견 사이 길 잃은 뉴스 이용자를 위하여

송승환 JTBC 기자



1. 현장 기자의 딜레마

“언론이 사실만을 말해야지!”

기사를 배포하고 나면 댓글을 꼼꼼히 읽는 편이다. 그 가운데서 이런 지적이 가끔 있다. ‘정말 뉴스는 사실만을 말해야 하나?’, ‘나는 사실만을 말해왔나?’ 이런 의문이 종종 든다. 왜냐하면 사실만 나열한 기사에서는 “그래서 어찌라는 거냐?”와 같은 지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는, 언론의 오랜 책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기자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맞닥뜨린다. 11년 차 기자인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이 있다. 3년 차 기자이던 2018년, 중앙일보에서 JTBC로 옮기면서 방송기사 쓰기를 새로 배우고 있던 때였다. 새 회사, 새 부서에서 빨리 좋은 기사를 써야겠다는 욕심과 조바심이 큰 상황에서 드디어 단독 발제한 리포트를 쓰게 됐다. 국회 고위 공무원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 보고서를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낸 문제였다.

기사 한 줄 한 줄마다 이 공무원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을 했는지 드러내 고자 온 힘을 다해 썼다. 자신 있게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부장의 데스크를 기다리는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온 부장이 나를 불렀다.

“해석은 빼고 사실만 써라.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사실만 나열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시청자에게 드러날 거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써봐.”

3년 차 기자가 이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워 숨고 싶었다. 다만 이 경험을 계기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됐다.

이러한 경험은 대다수 기자가 저연차 때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취재하는 것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이다. 기자냐, 기자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니, 정체성이라고 부를 만도 하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사실과 의견은 구분할 줄 알아야 ‘이제 기자답게 보고, 생각하고, 쓸 줄 아는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수습기자 기간을 거치면서 이와 상반되는 역량도 훈련받는다. 수습기자들은 선배 기자에게 아이템을 보고하면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얘기가 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가 있기 위해 기자들은 취재한 사실에 틀을 씌워 기자의 의견이나 시각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수습기자들이 흔히 보고하는 뺨한 교통사고의 경우 누군가에게는 면피성 보고를 하고 ‘킬’ 되는 아이템일 것이고, 사실의 재구성을 잘하는 기자는 운전자의 나이가 많다는 점과 페달 조작 실수가 사고 원인이라는 점을 조합해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문제와 연결해 봤을 것이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의 일이거나, 시의성이 있거나, 갈등이 첨예한 사안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저널리즘 교과서에서 배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외우고 일일이 따져서 판단하는 기자는 없다. 이것 역시 딱 보고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경험을 통해 훈련한다. 사건의 의미와 맥락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된 사실의 파편들을 재조합하는 것을 이른바 ‘야마’를 만든다고 한다. 이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기사, 즉 기사가 아닌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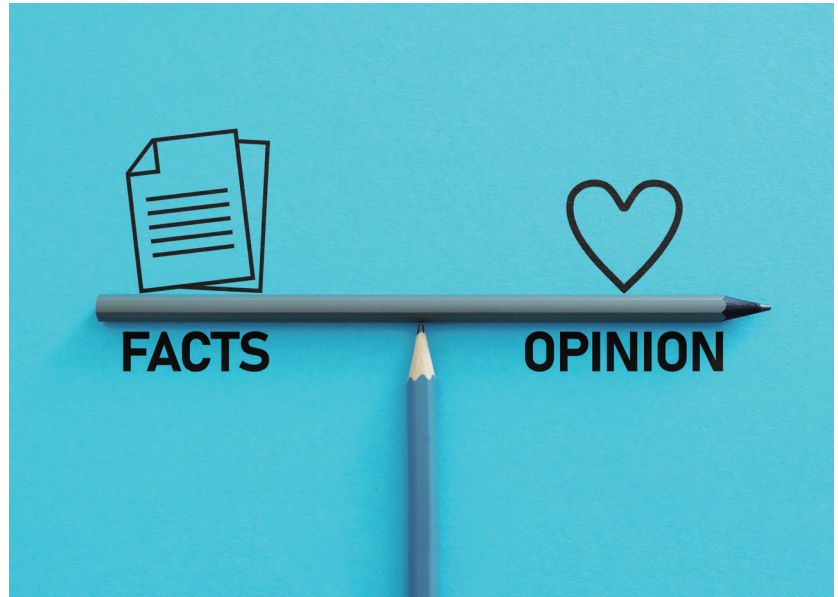
이 밖에도 저연차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어디에 어떤 순서와 분량으로 배치되는지를 보며 언론사가 어떤 입장을 선호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간단한 단신일지라도 의미의 경중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사실만을 써야 한다는 규율과 취재된 사실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두 가지 역할은 모순적이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 일을 매일 해내고 있다.

안타깝게도 기자들은 둘 다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곤 한다. 지난해 뉴스 이용자 10명 중 6명가량은 우리 언론의 편파성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¹⁾ 이는 ‘뉘시성 기사’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고 꼽힌 항목이었다. 또 약 56%는 언론사의 자사 이기주의적 기사가 문제라고 답했다. 두 항목은 언론이 자의적으로 사실에 의견을 담아 왜곡된 기사를 낸다는 뉴스 이용자의 지적을 보여준다.

반면 많은 언론 전문가들은 한국 언론의 형식적인 객관주의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관계의 나열과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 완성하는 스트레이트 위주의 기사는 불친절하고 객관적이지도 않으니, 차라리 맥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2025 언론수용자 조사. 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seq=600224&link_g_topmenu_id=&link_g_submenu_id=&link_g_homepage=F®_stadt=®_enddt=&searchkey=all&searchtxt=



락과 해설을 더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기자협회도 지난해 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사실 확인을 넘어선 맥락 보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일선 기자들에게 취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준 조직은 과연 몇 곳이나 있었을까”라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²⁾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언론인은 이 딜레마에서 앞으로 어려움 겪어야 하는 것인가.

2. 사실과 의견, 왜 구분하려 하나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이야기하려면 기자가 생각하는 사실과 의견, 그리고 그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학술적이거나 기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정의가 아닌 필자의 만 10년의 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개인적인 정의다.

사실이란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다. 기자는 사실을 사실답게 보고, 듣고, 기록하는 일을 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대인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사람을 쳤다’와 같이 하나의 사실이 성립한다. 하지만 기자가 경찰서 교통과

²⁾ 편집위원회, (2025. 3. 4). 혼란의 시대, 용기 있는 저널리즘 필요하다. 한국기자협회,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8007>



장에게 전화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차?’, ‘운전자는 누구?’,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는?’, ‘시간과 날씨는?’, ‘차량의 속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지?’ 등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 기자가 사실의 어떤 측면을 보고, 듣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기사로 재구성된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의견이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 등이다. 이는 어떤 사안에 대해 기자가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사실이나 칼럼 등은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방한다. 하지만 보도 기사에서 이는 금기시된다. 다만 직접 표현하지 않을 뿐, 가장 건조한 기사 유형인 스트레이트 기사에도 의견은 담긴다.

일간지의 1면 톱 기사를 비교해 보면 이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면 톱기사의 아이템은 제각각이고, 같은 아이템일지라도 제목의 표현이 다르다. 2026년 2월 11일 톱기사의 경우, 조선일보는 <쿠팡 배송정보·비번, 1.4억회 털렸다>가 제목이었고, 동아일보는 <내년 의대 490명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선발>이었다. 동아일보도 1면의 옆면 기사로 쿠팡 해킹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를 다뤘는데, 제목은 <“쿠팡 유출범, 전화번호 등 배송지 목록 1.5억회 조회”>였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털렸다’는 표현을 썼고, 동아일보는 ‘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쿠팡이 털렸다’는 피해에 집중했고, 동아일보는

‘유출범이 조회했다’는 범행을 부각했다. 대표적인 두 보수 신문도 이처럼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데, 매체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특성에 따라 의견은 모두 달리 반영될 수 있다.

기사 본문에 기자의 의견을 담는 방법도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방식은 ‘직접 인용’이다. 전문가, 목격자, 시민 등의 목소리를 큰따옴표 안에 넣거나 넣지 않음으로써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도록 한다. 직접 인용은 누군가가 그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화자가 책임진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기자들이 가장 손쉽게 의견이 담긴 기사를 사실처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다.

방송 뉴스에서도 기자의 시각을 담는 방법이 있다. 우선 방송 뉴스는 앵커의 도입 멘트나 기자가 직접 나와서 문제를 짚어주는 스탠드업, 스튜디오 출연 등의 방식이 있다. 신문보다는 더 직접적인 방식이다. 이외에도,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 뒤에 나오는 짧은 영상을 무엇으로 할지, 리포트의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지, 블러 처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배경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글씨체의 자막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서 모두 기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기사는 사실과 의견의 혼합물이다. 기사에서 사실과 의견이 완벽히 분리되어 본 적이 없다. 과거에도 사실과 의견은 함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언론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1항은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규정한다.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말은 사실과 의견을 적당히 뒤섞어 놓지 말라는 말로 해석된다. 다만 왜 이러한 의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추측컨대 이는 뉴스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언론과 기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 하는 목적’은 이렇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다. 언론인은 보통의 뉴스 이용자와는 달리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말하고 기록하는 것은 의견과 구분되는 사실이다’라는 권위를 만들어 낸다. 언론이 말하는 것을 뉴스 이

용자가 사실로 믿게 만드는 힘의 근원인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할 권위’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곧 언론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신뢰가 된다. 이 권위를 인정받는 언론은 신뢰받는 언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언론은 사실을 말할 권위를 잃게 되고, 언론의 신뢰도 역시 떨어지게 된다. 언론은 이와 같은 권위와 신뢰를 얻기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 해왔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 신문윤리위원회가 발간한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에 대표 사례 5개가 담겨 있다. 사례 소개에 앞서, 가이드북의 여는 글에는 “주관적 평가나 판단보다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진실 보도를 할 때 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언론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사례 ① <尹 “공개하면 한·중 전쟁” ‘간첩단 검거’ 알고도 함구³⁾ 기사는 본문에 포함된 익명 인용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익명 인용을 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받았다.

사례 ② <땅에 떨어진 교권…‘기피직업’된 교사⁴⁾ 기사는 제목에 사용된 ‘기피직업’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본문에서 인용한 ‘교사의 직업 만족도 관련 조사와 교사 외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피직업은 논리적 연결이 약해 과한 표현이라고 주의를 받았다.

사례 ③ <연세대 등 대학가 ‘극우’ 고개…“이한열 열사 뜻 있었나” 비판⁵⁾ 기사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을 ‘극우’로 단정한 것이 언론사 또는 기자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사례 ④ <노조 몽니에…MG손보 결국 구조조정⁶⁾ 기사에서는 노조의 행위를 ‘몽니’라고 자의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례 ⑤ <2024 가요결산 대중 치 떨게 한 배신 TOP 5⁷⁾ 기사는 공분을 산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고, 지나친 비판성 제목을 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 A신문, 2025년 4월 17일 자 1면 보도

4) B신문, 2023년 5월 15일 자 26면 보도

5) C신문, 2025년 2월 11일 자 10면 보도

6) D신문, 2025년 5월 14일 자 11면 보도

7) E신문, 2024년 12월 22일 자 온라인 보도

다섯 개의 사례를 종합하면, 주로 제목의 표현이나 본문에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에 의견이 담겼다. 포함된 의견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거나 논리적 연결이 약하고, 자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선입견, 가치 등이 반영된 경우 사실과 의견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사에 의견이 담긴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의견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견을 의견답게, 사실은 사실답게 쓴다면 의견이 담긴 기사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제는 위장술, 사실인 척하는 의견

최근 언론의 자유에 제약을 두는 법안이 여럿 발의돼 일부는 국회를 통과했고, 일부는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니 다루지 않지만, 이러한 법안이 나오고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에 적개심을 품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한 번쯤 언론에 피해를 보았거나 속아본 경험이 자리 잡은 듯하다. 언론이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위장해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동조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것이다. 그 수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그것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일부 기자들은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러 위장술을 사용하고 있다. 뉴스 이용자가 발견하고 피해 갈 수 있도록, 그중 대표적인 3가지 위장술을 해부해 보자.

1) 선별적인 직접 인용

기자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의견을 직접 서술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입을 빌려 표현한다. 이는 마치 복화술사와 같다. 자신의 입은 움직이지 않고 인형의 입만 움직이지만, 사실 진짜 말하는 사람은 복화술사다.

어떤 사안의 해석이나 전망을 다룰 때 이런 전략은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특히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데 주로 해당 분야 '교수'의 의견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룬 기사들

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주 인용됐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고 38일간 비공개 평의를 하는 기간에 결과를 예상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토대로 '8대0 인용설'부터 '5대3 기각설'까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일부 언론사 또는 기자들은 항간에서 도는 '5대3 기각설'이 가능성이 크다고 본 듯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주장할 수는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반복해 인용하면서 이러한 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내용은 접근할 수 없어 이들의 전망은 추측에 불과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에게 마치 사실처럼 전달돼 이들의 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방송에서는 시민 인터뷰를 선별적으로 활용한다.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대다수의 시민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시민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한 명만 걸려라'이다. 기자의 의견과 반대되는 인터뷰는 배제하고 일치하는 인터뷰만 기사에 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실명 인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익명 인용의 경우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특히 권력자를 익명 인용해 기사의 의견을 강화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문제의 급이 나뉜다. 흔히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검찰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같은 표현은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적어도 어느 기관에 소속된 익명 취재원인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관계자',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 기자가 취재하고 인용을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자가 봐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뉴스 이용자는 주의 깊게 살펴보더라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다. 대다수 뉴스 이용자는 이러한 구분을 시도해보거나 의문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기사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주류의 생각 또는 확정된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2) 한국적인 특수한 관행

직접 인용 방식이 의견을 기사에 담는 전 세계 언론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면,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는 관행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무(無)주체 피동형 문장'이라는 서술 방식이다. 말 그대로 주체를 숨기고 피동형으

로 서술하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와 같은 문장이다. 이런 문장에 사용되는 서술어로는 주로 ‘전해졌다’, ‘알려졌다’, ‘했다고 한다’, ‘확인됐다’, ‘파악됐다’ 등이 있다.

예로 든 문장을 능동형으로 고치면 “검찰이 A씨의 뇌물 혐의를 조사했다” 또는 “검찰은 ‘A씨의 뇌물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가 된다. 이렇게 쓰면 행위의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게 확인해 보면 되겠다는 단서가 담기게 된다. 하지만 무주체 피동형 문장으로 쓴 경우 그 사실을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이 불명확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문장에 주체 없이 기자의 의견을 넣은 뒤 ‘해석된다’, ‘풀이된다’, ‘지적이 나온다’ 등으로 끝맺으면 쉽게 의견을 사실처럼 포장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수습기자 기간 ‘절대로 쓰지 말라’고 교육받은 서술 방식이다. 이러한 문장을 쓴다는 것은 해당 사실에 대해 취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은 아예 기사에 담아서 안 된다고 교육받았다. 다만 타 언론사의 기사 중 정말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데, 도저히 확인이 안 되지만 쫓아가는 기사를 써야만 할 때, 해당 언론사를 인용하며(예: A신문에 따르면) 무주체 피동형 문장(예: 전해졌다)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표현을 과거보다 더 쉽게 사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키인즈’에서 대표적인 무주체 피동형 서술어 ‘전해졌다’와 ‘알려졌다’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 기간별 기사 수를 비교해 보면 대략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년 전인 2016년에는 이러한 서술어를 포함한 기사가 5만8000여 건이었는데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9만2000여 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의 한국적인 특수한 관행도 등장했다. 기사의 서두에서 ‘○○일보 취재를 종합하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취재원 인용 없이 기자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직접 서술하는 방식의 기사가 최근 늘고 있다. 이는 피의사실 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은 뉴스 이용자에게 마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니 이는 사실이다. 그러니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과거에는 ‘관계자’의 권위를 차용해 의견을 담았다면, 이제는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재구성

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사실을 말할 권위를 내재화한 이런 과감한 서술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시기적으로는 2019년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기사를 쓰기 어렵게 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른바 ‘관계자 저널리즘’ 혹은 ‘발아쓰기 저널리즘’으로 비판받는 관행을 못하게 막았더니 문제가 이상하게 더 심각해진 것이다. 이처럼 언론이 과감하게 사실을 선언할수록 반대로 뉴스 이용자는 기사 내용을 검증할 출처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 언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3) 논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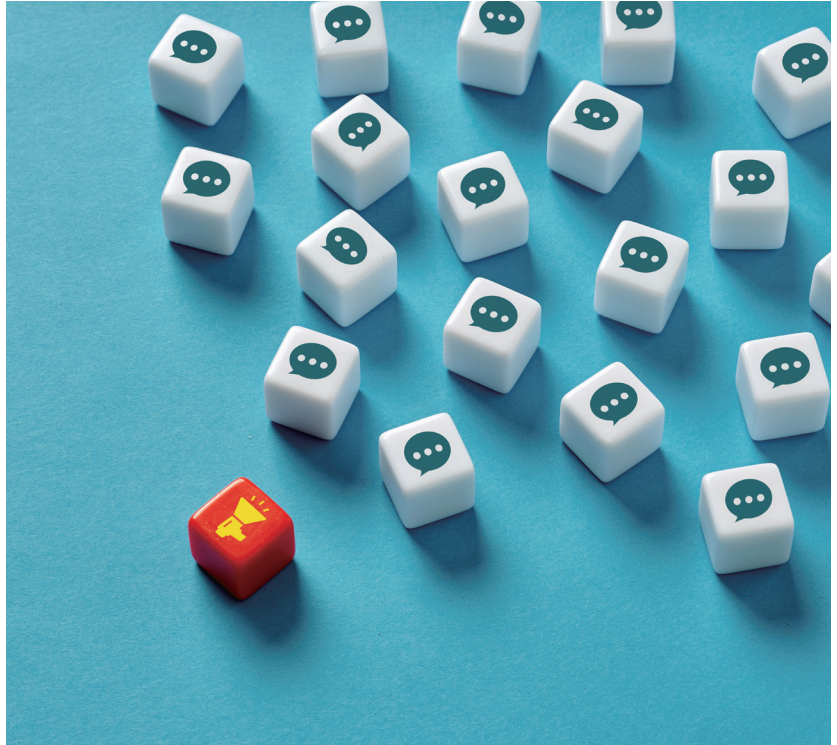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의견을 사실로 가장 쉽게 둔갑시키면서도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논란의 국어사전 상 뜻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를 ‘사사로운 의견 다툼을 과장해 공론장의 문제로 키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몇몇 기자들은 어떤 문제를 비판하고 판을 키우고 싶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의 댓글을 살핀다. 여기서 비판적인 내용만을 몇 개 모아, ‘논란이 되고 있다’거나 ‘공분이 일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러한 의견 다툼이 있기는 하므로 이는 마치 ‘사실과 같아 보이지만, 이를 중요한 문제로 키우는 것에는 기자의 ‘의견’이 다분히 반영돼 있다.

문제는 이 손쉬운 방법으로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공인 중에는 피해자가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고, 최근에는 일반인조차도 심심치 않게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이나 이에 질린 뉴스 이용자들은 의견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불만과는 반대로 최근 사실을 가장하여 의견을 보도하는 방식을 언론사의 주된 경영 전략으로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뉴스 이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의견을 사실로 만들어 보도하면서 이들을 충성도 높은 팬덤으로 유지하는 전략이다.

필자 역시 때때로 취재 현장에서 “저는 JTBC 뉴스룸만 봐요”라고 응원



해 주는 시민을 만난다. 이럴 때마다 항상 “감사하지만, 여러 언론사를 고루 봐 주세요”라고 부탁한다. 일시적으로 충성도 높은 뉴스 이용자가 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갈증 날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다른 언론사들도 의견을 사실처럼 포장해 팬덤을 유지하는 경쟁에 뛰어들면 한국 언론 전체의 뉴스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4. 구분하기에서 드러내기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뉴스라는 것은 사실의 재구성이고, 사실만을 나열한 기사에서도 선택, 배제, 배열 등을 통해 필연적으로 의견이 부여된다. 여기에 대다수 언론사는 자사의 방향성을 반영한다. 그 방법으로는 제목의 표현, 본문에서의 직접 인용, 서술 방식의 변화 등이 있다.

기사가 사실과 의견의 혼합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취재와 기사 작성 관행 내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적절히’라는 단어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앞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사실과 의견의 구분 원칙을 어긴 사례 및



사유들을 다시 살펴보면, 언론은 기사에 의견을 담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포함해야 하고, 적당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적당한 강조는 허용되지만 정도가 지나쳐 과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식이다. 하지만 적절히, 적당히 잘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기자마다, 언론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잘 지키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법으로 으레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뉴스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다. 뉴스 이용자가 기사에 포함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읽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법을 공부해서 나 홀로 소송을 통해 잃은 돈을 찾으라는 말과 비슷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관찰하고, 읽고, 쓰는 일은 꽤나 어렵고 전문적인 능력이다. 뉴스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향상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보다는 언론의 관행이 바뀌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사실 필자는 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한국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승-전-뉴욕타임스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에 신물이 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언론 환경이 다른데 그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 가지고 비교를

당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한국 언론도 마음만 먹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언론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투명함과 친절함이 되어야 한다. 경제부에서 국제경제를 담당하면서 외신을 매일 볼 때 느꼈던 것은, 한국은 영미권보다 웬만한 서비스는 다 친절한데 뉴스만큼은 영미권이 압도적으로 친절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있어서 사실을 사실답게, 의견은 의견답게 보이도록 돕는 시각적, 문체적 장치가 눈에 띄었다.

우선 해외 언론의 경우, 강하게 반영된 기사는 클릭하기 전부터 'Analysis'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다. 그 옆에 누가 분석했는지 이름이 표기되기도 한다. 이는 뉴스 이용자에게 읽기 전부터 이 기사에는 의견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으니 감안해서 읽으라는 신호가 되어 준다. 반면에 한국 뉴스를 읽다 보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외신의 분석 내용을 사실처럼 인용하곤 한다. 한국 언론은 외신 기자의 의견조차 '사실을 말할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를 인용할 때도 해외 언론은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때로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한국 기사가 '홍길동 한국대학교 OO학과 교수'라고 표기하는 것만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뉴스 이용자에게 납득시키는 것과는 달랐다.

또 해외 기사는 외부 자료를 근거로 삼을 때 가능한 하이퍼링크를 통해 그 자료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해 놓는다. 한국 기사는 '통계청에 따르면'과 같이 불친절하고 부족하게 설명해, 뉴스 이용자가 이를 직접 찾아해매는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확인을 안 해보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외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언론이 고민 중인 문제를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객관성의 신화가 갈수록 힘을 잃으면서 언론의 사실을 말할 권위가 예전 같지 않고,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더 친절하고 투명하게 뉴스를 제공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친절함과 투명함은 한국 언론이 따라 하는 데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미 시도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어서 반갑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을 보면 본문에서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진

하게 표시하거나, 색깔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고, 어려운 용어에 각주를 다는 등의 시도가 눈에 띈다. 아쉽게도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는 이런 효과가 대부분 삭제된다.

누군가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기능’이 아닌 뉴스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당장 회사에서 기사를 쓸 때마다 이러한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시킨다면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고 하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뉴스 이용자에게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만 한다.

요즘 차로 국내 도로를 달릴 때 갈라지는 구간에서 분홍색, 초록색으로 그려진 유도선을 만나면 길을 잘못 들어가서 빙빙 돌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심이 된다. 이런 유도선을 그리기 시작한 게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과 의견을 친절하게 구분하는 것도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 언론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극단적인 발상일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언론은 기사 내에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장에 분홍색 유도선이라도 그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기사 하단에 투명성 보고를 추가해 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느냐는 압력이 들어올 때, 어떤 사실을 확인했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무엇을 판단했으며, 무엇을 추정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왜 이 아이템을 발제했고, 어떻게 취재했으며, 편집 과정은 어땠고, 어떤 점이 후속 취재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서술해 놓는다면 뉴스 이용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신뢰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 말한 ‘기자가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규율’과 ‘맥락과 해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사이의 딜레마가 이야기를 풀어가며 다소 해소된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언론인이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격언으로 ‘언론인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좋아한 이유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이용자들은 믿어야 한다는 권위를 담고 있어서였다. 하지만 이 말을 이제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다.

‘언론인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투명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취재하고 쓸 수 있다.’

앞으로 언론의 사실을 말할 권위는 투명성과 친절함에서 기인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취재했고,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 테니 뉴스 이용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이 신뢰받을 것이다.

물론 11년 차 기자인 필자는 당장 내일 아침 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 해오던 여러 관행을 따를 것이고, '야마'를 세우려 틀 짓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과 의견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 글의 비판과 제언은 사실 자기반성에서 출발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질 수는 없다. 다만 내가 다짐하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그 고민의 흔적을 하나씩이라도 투명하고 친절하게 뉴스 이용자에게 공개해 나가자는 것이다. 🍵